

-(원다인) : 안녕하세요?

모두 점심식사를 맛있게 하셨나요?

저는 빈곤국가의 인터넷보급과 SDG라는 주제로 이번 세션을 진행할 원다인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에 재학 중이며 빈곤과 관련된 정보를 확산하자라고 해서 일하고 있는 운영 팀으로써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저희의 발표자와 패널 분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발표를 담당해 주실 컴퓨터 공학과 GP3 Korea 김소희 양이십니다.

-(박수)

그다음은 연세대학교 중어중문과 GP3 Korea 리서치팀으로 현재 빈곤국가의 교육에 대해서 집필 중인 배혜민 학생이십니다.

다음 토론자분은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GP3 Korea 영문번역팀으로 해외 빈곤기사를 한글로 번역하여 배포를 담당해 주고 계시는 유하선 학생이십니다.

그리고 진흥정보사회를 선도하는 글로벌 ICT의 연구기관이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부연구위원이자 KrIGF 프로그램 위원으로써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는 김태은 연구위원님을 모셨습니다.

저희 세션의 주제는 빈곤국가의 인터넷 보급과 지속가능한 발전입니다.

빈곤 국가의 인터넷 보급이라, 생각보다 익숙하지만은 않은 주제인 것 같은데요. 그러나 앞으로 빈곤국가에 대한 발전을 논할 때 인터넷을 제외하고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논의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아직은 이런 수준이지만보다 많은 분들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하여 이번 포럼에 이와 같은 주제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세션은 발표를 30분간 듣고 5분 동안 휴식을 한 다음에 다시 패널토의로 이어지고 마지막에 한꺼번에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소희 학생, 부탁드립니다.

-(김소희) : 안녕하세요.

오늘 빈곤국가의 인터넷 보급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 발표를 맡게 될 김소희입니다.

오늘 저는 인터넷과 정보통신 기술의 보급현황, 어려움, 한계점, 해결방안 순서로 진행해보겠습니다.

먼저 새천년개발목표라는 것은 2000년도에 UN에서 채택된 의제로 2015년까지 빈곤을 반으로 감소시키자는 세계인의 약속입니다. 주로 빈곤해결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고 교육과 건강에 대한 기본적인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2015년도에 만료가 되어서 후속목표로 채택된 게 지속가능한 개발, SDG입니다. 이것에 대한 슬로건은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일하고 있습니다.

빈곤, 건강, 교육 그리고 불평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인 구체적인 목표를 담고 있는데요.

인터넷 보급은 특히 아홉 번째 목표인 확신과 이런 것들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ICT에 대한 접근을 높이고 인터넷 액세스를 제공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인터넷 보급은 단순히 아홉 번째 목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SDG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핵심적이고 필요한 기술입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을 활용해서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CT 기술을 활용했을 시에 이런 목표들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습

니다.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인터넷의 보급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단순히 정보를 받고 정보를 검색하는 정도로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은 굉장히 일부분에 속하고요.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해 데이터, 소셜미디어, 클라우드펀딩까지 많은 분야에 접목이 되어 있고 정보통신기술이라는 넓은 개념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 우리는 너무나 많은 발전을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왔지만 이러한 발전이 모든 나라에서 균등하게 분배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그래프는 지금 각 나라에서 인터넷을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지를 나타낸 건데요. 한 눈에 봐도 이 수치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치란 물리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수치가 아니라 실제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실제로 인터넷을 쓸 수 있고 쓰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건데요.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ITU는 매년 정보통신기술의 보급이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2018년도에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인구 중에 반 정도밖에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80%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반면에 개발도상국에서는 45%, 최빈곤국은 20% 정도의 사람들만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보급에 대한 지표로는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가정의 퍼센테이지인데요. 이 수치를 살펴보게 되면 2005년도에는 20%정도의 사람들이 가정에서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었지만 2018년 기준에서 전 세계적으로 60% 정도의 사람들이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란색은 10%에 밀도는 아주 적은 수치로 아직 많은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실제로 가정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전 세계 평균이 50%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인 즉슨 사람들이 컴퓨터가 아닌 다른 매개체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거기서 많이 쓰는 것이 모바일 핸드폰입니다. 오른쪽의 차트를 보시면 모바일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 퍼센테이지를 가리키는데 선진국은 95% 이상이 그리고 세계 평균도 75%가 모바일을 사용하고 있고 최빈곤국에서는 52% 정도 되는 꽤 높은 수치가 모바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바일 핸드폰을 사용한 인터넷 액세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는 유연성과 비교적 저렴한 가격이 사람들에게 인터넷 접속을 위한 합리적이고 쉬운 인터넷 접목 경로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모바일 장치에서 인터넷에 액세스하라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데 다시 말해 그 사람이 3G 접근이 가능한 곳에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보시면 파란색이 쓰리지에 반응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18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쓰리지 네트워크가 인구의 90%가 사용할 수 있는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바일 네트워크를 이용한 인터넷 접속이 긍정적인 효과를 얘기할 수 있고 빠른 성장을 보일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터넷 보급이 빈곤국에 필수적으로 해야 됴도 불구하고 보급률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격입니다.

여유가 되는 나라는 약 29개국에 불과한데요.

이러한 가격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측정하고자 ITU는 2010년에 2015년까지는 브로드밴드 가

격을 합리적으로 낮추기 위해서 5%로 측정했고 20%로 낮추자고 정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가격이 이 기준선에 못 미치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표는 유선 브로드밴드 가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다시피 선진국, 개발도상국 모두 다 내려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선진국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모바일 브로드밴드 서비스란 유선 브로드밴드 서비스 모두 다 이 기준선에 못 미치고 있는데요. 이 다음 표는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노란색이 최빈곤국으로 표시되고 있는데 두 경우 모두 못 미치는 걸로 나오고 유선 브로드밴드는 그 부담감이 최빈곤국에서는 더 큰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소득이 하위 60%에 있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자신의 월급에서 6% 크게는 61%까지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나와서 많은 전문가들이 2026년까지는 이 기준선에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정보 부족인데요.

물리적인 인프라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이 온라인상의 인프라입니다.

약 80% 정도의 인터넷 콘텐츠가 실제적으로는 10개의 언어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힌디어 인도에서 널리 사용하는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0.1%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문제는 뭐냐면 물리적인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서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속하여도 만약에 자신의 언어로 된 정보나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찾지 못한다면 큰 문제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인터넷 사용이 아홉 번째 목표인 사회혁신을 이루기까지는 큰 어려움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100만 명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선진국에서는 1100개의 논문이 발표되는 반면에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7개의 논문밖에 발표되지 않고 있고 이러한 부족한 과학리서치 시설과 기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UN에서는 교육기관과 제휴를 통해서 파트너십을 통해서 리서치기관의 활성화를 돕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부족한 교육 수준입니다.

아까 언급한 물리적인 인프라나 온라인상의 인프라만큼 교육도 중요한데요.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가격이 내려가도 만약에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해야 하는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인터넷 사용할 교육수준이 되지 못한다면 이것 또한 인터넷 활용을 막는 장애물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교육수준의 차이를 비교하자면 최빈곤국가에서는 9% 정도만 대학 수준을 받고 있고 그와 반면해서 전 세계에서는 33% 정도가 교육수준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기회의 불평등이 결국에는 인터넷 접속의 불평등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실제로 지금 인구의 15%가 문맹이고 여성이 더 높은 문맹률을 가지고 있는데 인터넷 사용 수치를 비교해봤을 때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최대 50% 안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을 긍정적으로 사용한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야기하지만 이러한 인터넷 접속을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누리게 된다면 더 큰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불평등의 차이는 단순히 여성과 남성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이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표를 보시면 24세 이하의 학생들과 24세 이상의 성인의 디지털 활용 능력을 비교한 차트입니다. 보시면 난이도가 높은 기술을 요구할 때 그러한 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나이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로 발전이 덜 된 지방과 도시를 비교해봤을 때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크게는 반 이상 정도 디지털 활용 능력이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낮은 교육과 인식 부족은 단순히 인터넷 사용을 못한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도 더 큰 문제점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인터넷 사용의 안 좋은 점 때문에 인터넷을 차단하거나 콘텐츠를 제한시키는 나라가 많습니다. 셋다운제를 경험한 나라는 인도로 2018년에만 100번의 셋다운을 기록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19년 대선 때는 정부가 인터넷 통신사 업체에다가 인터넷 접속을 끊으라고 시킨다든지 반정부 시위를 막기 위해서 페이스북, 스카이프 같은 서비스를 제한 시켜서 서로의 소통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민주주의가 확립되지 않거나 정치적으로 불안한 그리고 갈등이 심화된 나라에서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거의 하나의 더 큰 문제는 서양이나 발전된 나라에서는 불건강한 인터넷 사용이 단순히 정치적으로 허위 뉴스가 유포되는 것으로 끝나지만 미얀마와 같이 빈곤이 더 심한 나라에서는 유흔사태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경우 2011년 전까지는 통신업계의 규제가 굉장히 심한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나아졌고 이로 인해 인터넷 보급이 굉장히 저렴해졌습니다. SNS가 쉽게 대중화가 되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SNS를 사용하게 되었고 페이스북에서 폭력을 조장하는 글이 올라오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갈등을 심화시켰고 2012년에 무슬림과 불교도신자들의 물리적인 마찰로 이어져 14만 명이 피난을 가는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사태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이런 데에서는 적극적인 개입이 없었고 페이스북에서 선도하는 글이 유포되었고 2014년도에는 무슬림과 불교도신자들의 갈등이 심화되어 폭력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서 저희는 페이스북과 같은 기업의 독과점이 낳을 수 있는 부작용으로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스님은 미얀마의 불교도신자로 극우적인 성향 때문에 미얀마 국가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연설을 못하도록 제재가 가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교신자도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아무런 제재 없이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영상을 올림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거는 단순히 미얀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스리랑카에서도 무슬림 약국에서 피임약을 섞어서 판다는 허위뉴스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유포가 되면서 굉장히 큰 유흔사태로 이어졌는데요.

이러한 페이스북은 선동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허위사실이 올라오는 거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개발도상국들을 자신의 새로운 사업장의 확장이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진지하게 보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페이스북에서는 Free Basics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만 가격이 비싸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인터넷을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이러한 서비스가 실제로 봤을 때는 무료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무료로 SNS를 쓸 수 있으니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만 날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페이스북이 자신들의 유일한 인터넷창으로 허위사실이 유포가 되거나 선동적인 글이 올라왔을 때 이게 자신들의 유일한 소스이기 때문에 더 쉽게 선동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점 네 가지인데요. 바로 물리적인 인프라, 합리적인 가격의 측정이 필요하고, 모든 게 다 맞추어져도 건강한 인터넷 사용을 장려해야 합니다.

인터넷 보급 문제를 다룰 때 단순히 가격이란 인프라만 논할 수가 없고 이렇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고 없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인터넷의 양질이 있고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두어야 합니다.

인터넷 문제가 단순히 물리적인 기반의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인식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봤을 때 국가, 시민, 기관에서의 협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기업도 기술을 개발시키고 미얀마의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윤리적인 중요성도 인지를 하고 시민 쪽에서도 올바른 인터넷 사용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정부에서도 활발한 투자를 이어나가고 인터넷 미사용자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과 올바른 정책도 나가야 하고 국제연합에서도 이러한 몇 몇 국가들의 인터넷규제완화를 돕고 필요한 것을 조사해야 합니다.

인터넷보급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터넷 보급률이 현저히 낮은 점을 봤을 때 인터넷 보급과 건강한 인터넷 사용을 보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패널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 발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원다인) : 저희 5분 동안 휴식 시간 갖고 패널 토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토의는 각각 파트별로 인터넷 보급과 SDG 인터넷과 경제성장 그리고 인터넷 발전과 민주시민의 마지막으로 교육 분야에 대해서 각각 사회자가 다시 나오셔서 파트를 나누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하선) : 지금부터는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소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터넷보급과 지속가능한 발전은 중요한데요. 토의 주제 중에 첫 번째로 인터넷 보편화를 방해하는 주요인으로써 접속비용 부담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어떤 국제기구가 노력하고 있고 거기서 나온 해결 방안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김소희) : 출범시킨 연합기구가 있는데 이게 바로 저가인터넷 연합입니다.

공공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현재 국제전기통신연합이라는 ITU도 함께 노력하고 있는데요. 2018년 보고서에서 접속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경쟁시장인데요.

2016년까지만 해도 거의 독점적으로 하던 코모러스 텔레콤이 30% 정도 가격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전에는 다양했던 데이터 상품의 종류가 축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두 번째로는 오티티나 페이스북의 Free Basics와 같은 서비스입니다.

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 또 제로등급 서비스는 이용자의 데이터 상한선을 정하지 않고 특정 콘텐츠에 대한 것을 가능하게 하여 경제성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하선) : 접속 부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ITU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쉽게 말해 해당 언어로 된 언어가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기반 시설 문제도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어떤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원다인) : 먼저 언어는 아프리카 내에서도 인터넷 접근성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응용 개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존의 알렉사와 같은 응용 프로그램에 아프리카의 다양한 언어기능을 추가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한계점도 지적받고 있는데요. 기기를 개발할 때 필요한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거의 십 몇 년의 시간 동안 녹음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 전문가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언어로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장치에 글꼴 지원 및 입력 방법을 제공하는 기술 솔루션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수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들은 번역 클라우드소싱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유하선) : 결국 무용지물이겠네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요구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배혜민) : 기반 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많은 통신업체들과 기관들이 열기구 등을 이용한 여러 가지 사업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전기통신연합은 정책입안자들에게 심사숙고한 국가 광대역 통신망에 일관된 리더십을 요구했습니다.

-(유하선) : 이러한 문제들이 단순히 어느 한 집단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인터넷 보급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에게 요구되는 구체적인 협력은 무엇이 있을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소희) : 물리적인 인터넷 보급 뿐 아니라 기업, 정부, 시민, 단체 등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협력해야 합니다. 아이티 기업은 기술개발, 현지 기업과 제휴를 맺어서 많은 사업을 확장시켜야 하고요. 페이스북이나 구글과 같은 기업에서는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해서 아프리카의 많은 기업들과 제휴를 맺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제전기통신연합 사무총장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정부의 적극적인 헌신, 그리고 디지털 기술의 중요성을 인지해야만 인터넷 가격이 합리적으로 측정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나오고 있고요. 시민사회에서도 인터넷 사용의 중요성을 앞장서서 인식을 시키고 올바른 인터넷 사용 문화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원다인) : 맞습니다.

실제로 인도에서는 페이스북에 로그와 관련하여 중립성 문제가 크게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나 콘텐츠가 제한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문제로 인도 국내에서는 시민활동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활동이 진행되기도 하였는데요. 전기통신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지원하고 기술적 발달 수단을 촉진하며 이를 위해 국가가 관계자들 간의 이해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실제로 ITU 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 기술형성에 대한 국제사회 지원이 진행되었습니다.

국가워크숍에서 일주일간 전수한다든가 역량강화사업도 진행했다고 합니다.

미얀마 기술훈련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유하선) : 이처럼 단순히 물리적 인터넷 보급만이 아니라 모두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지구촌 빈곤 탈출에 기여하고자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무엇이 있나요?

-(배혜민) : 대표적인 사례로는 프로젝트 룬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빈곤 국가의 소외된 지역에 거주하는 사용자들에게 인터넷을 사용하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인터넷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통신장비를 썩은 열기구를 상공으로 띄워서 접속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학교를 가지 못하는 학생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등의 이점이 있지만 아직까지 여러 가지의 한계가 등장합니다.

열기구가 지점에서 벗어나면 신호가 끊길 수 있고 끊임없이 이렇기 때문에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개발도상국 국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비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라리아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풍선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물론 이 프로젝트 룬의 의의도 상당하지만 긴급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나온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프로젝트 룬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용화하기에는 불안한 단계입니다.

-(유하선) : 무려 인터넷이라고 하면 참 창의적이고 좋은 것 같았는데 몇 가지 한계가 지적이 되고 있네요. 프로젝트 룬과 더불어도 또 다른 사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소희) : 두 번째로 많이 하고 있는 게 페이스북의 Internet.org인데요.

이 사업은 오지에 무료로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바티에어텔과 제휴를 해서 인터넷 사용속도가 빠른 것을 확대를 하고 있나요.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많은 한계점이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원다인) : 맞습니다.

망 중립성을 저해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특정 사이트에만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저해한다는 것인데요.

활동가는 결과적으로 디지털 빈민층을 유발할 강한 우려를 보였고 일각에서는 인터넷이 아닌 페이스북넷이란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모든 형태의 차별, 간섭을 방지하고자 이 서비스를 중단하였는데요. 이는 미국에서 최근 망 중립성을 폐지하는 국가와는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유하선) : 지금까지 인터넷 보급과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주제로 토의를 해봤습니다. 접속 부담의 문제나 소수언어 부족의 문제 무료 인터넷 사용 문제가 있었지만 각각 한계점이 있어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의 토의를 바탕으로 김태은 부연구위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 : 토의 잘 들었습니다.

정보격차 이야기가 나온 거는 90년대 후반부터고요.

결국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는 면에 있어서 접근성의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서는 어포더 데이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무선 데이터가 공급이 되면서 유선에 대한 접속성에 대한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단말기 가격이 내려가고 나름대로 유심카드라든가 선불 서비스를 쓰면서 좋아졌는데 브로드밴드를 써야 되면서 개도국에서의 높은 가격이 장애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미 옛날에 음성전화가 보편서비스였다고 하면 지금은 인터넷이 부가서비스가 아니라 보편서비스이기 때문에 적정 가격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맨 처음에 정보 격차를 위해서 할 때도 민간의 힘으로 하자, 그래야 된다고 했지만 거기서도 제기됐던 문제점은 결국 상업적인 이익을 추가하는 데는 상업적인 데만 투자할 수밖에 없고 여기서도 다양한 지점들이 있다는 부분에서 정부라든가 그것을 감독하

는 시민사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 대안으로 역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배제할 수 없고 이게 제공이 되다보면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개도국의 인프라에 대해서 부담이 자꾸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프라에 대한 재투자가 안 될 수 있는 문제도 존재하는 겁니다.

두 번째, 소수 콘텐츠 문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고유언어나 토착언어를 강조했습니다.

영어 중심의 콘텐츠가 중심이 되고 고유 언어라든가 고유 콘텐츠가 되는 부분에서 우려가 제기돼 있고 중심이 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과 웹접근성에 대한 문제인데요.

웹 접근성은 많이 보시겠지만 인터넷이나 모바일에 들어가면 장애인도 똑같이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 부분이 단순히 장애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문맹자가 될 수도 있고 정말 특이한 언어를 쓰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 있어서 접근성이라는 부분들이 강조돼야 하고요.

특히 토착언어, 소수언어는 두 개가 결합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고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업, 정부, 시민단체 각각의 역할이 다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IoT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하는 부분들은 그쪽 정부가 모범 사례라든가 저희 같은 경우는 한국은 성공사례입니다. 정책경험이라든가 성과를 공유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네 상황을 진단하고 그 진단에 따라서 새로운 발전전략 같은 거를 만들어주게 하는 부분이라면 기업이 할 수 있는 영역은 기업의 사회적 기여라든가 그런 측면과 함께 상업적인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시민이나 엔지오는 것에 대한 제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국은 ICT가 많이 발전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한 편이고 특히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에서 경험 전수를 받고 싶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많이 해온 편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무료 인터넷 부분은 사실 기술이 발전됨으로 인해서 이게 다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또는 다른 의도라든가 실제로 기술적으로 미숙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개도국 자체가 발전을 하더라도 개도국 내에서도 격차가 많이 발생하는 게 문제거든요. 아프리카 같은 지역도 도시집중이 이루어지면서 도시 쪽에서 사업자도 나오고 그러는데 오지나 사람이 많이 안 사는 곳에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개도국 내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글로벌 아이티 기업들이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채널링을 통해서 무료 인터넷을 제공해 주려는 부분도 있지만 국가 차원이나 어떤 지역 차원에서 커뮤니티 네트워크라는 이야기가 요즘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통신 협동조합 같은 느낌인데요. 정확하게 설명은 안 되지만 어떠한 사업장에다 거기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만을 위한 통신사업을 해서 통신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식의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전체 국가의 차원이라기보다도 개도국 내에서는 오지라든가 취약적인 부분에 있어서 고려를 할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이겠지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업적인 이익이나 이런 의도를 쫓아가다보면 실제로 다른 소외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공공과 민간이 같이 협력을 한다든가 현지의 커뮤니티가 협력을 해야 한다는 부분이 고려가 돼야지 효과적인 그런 솔루션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다인) : 좋은 대안까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유와 경제성장에 대한 주제입니다.

-(김소희) : 빈곤국가의 인터넷 보급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논의에 이어서 인터넷을 통한 빈곤국가의 정보공유와 경제성장의 가능성에 대해 토의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 확대는 무엇보다 새로운 경제적 기회입니다.

인터넷의 보급이 빈곤국가의 경제성장에 어떤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기에 앞서서 글로벌 빈곤의 감소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배혜민) : 그래프로 중요성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인당 GDP와 삶의 질에 대한 불만족 수준을 제시하여 나타낸 것입니다. 세로축에 불만족인데 감소하고 있습니다.

GDP 수준이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높아진다는 뜻인데요.

이는 너무 당연하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는 개인의 부와 삶을 직결시키지 않아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글로벌 빈곤 감소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는 다음 그래프가 나타내고 있는 시사점을 떼어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원다인) : 맞는 말씀입니다.

글로벌 빈곤을 생각할 때 삶의 질 향상 문제는 만족도와는 관련된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빈곤의 감소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 받으면서 미래를 살아갈 기회입니다. 교육기회의 확대, 인간적으로 노동할 수 있는 기회와 일맥상통합니다.

빈곤을 벗어남으로써 미래를 생각하게 될 기회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하라나 남아시아를 주된 배경으로 약 7억 5천만 명이 극심한 빈곤에 처해 있습니다. 이들은 중산층으로 올라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소희) : 글로벌 빈곤의 감소의 중요성을 당연하게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유하선) : 산업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상품이 거래될 때 국가의 경제적 규모는 확대될 수 있습니다.

시장 경제와 교류를 통해 부는 끊임없이 증가해왔습니다.

다음의 그래프는 GDP, 무역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1인당 실질 GDP의 변화는 상품의 수출과 적지 않은 상관에 놓여 있습니다.

전 그래프를 다시 보여주세요.

더 많이 거래한 국가일수록 더 부유해졌고 따라서 산업의 성장은 빈곤 감소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그래프는 중국의 1인당 GDP 상승 추이를 보여줍니다.

중국은 지난 40년 동안 전례에 없는 무역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1978년도에 해외무역을 허용한 이후 중국은 현재 강국의 위치에 올라섰고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향상되었습니다.

-(김소희) : 우리가 모두 알고 있다시피 전 세계 산업은 네트워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인터넷 웹페이지만 생각해도 알 수 있는 사실인데요. OECD 국가 대부분의 기업이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고 상품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습

니다.

경제 발전과 감소의 측면에서 빈곤국가에 인터넷이 보급이 돼야함은 명확해 보입니다.

지금부터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빈곤 국가에 인터넷이 보급이 될 때 기대할 수 있는 양상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원다인) : 먼저 앞선 주제와 맥을 같이 하여 인터넷의 보급은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UN은 아홉 번째 지속가능한 목표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및 장려를 들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의 접근성 확보를 통해 안정적으로 가능해집니다.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아래 인터넷 접근성은 경제적인 요소입니다.

안정적으로 진전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ICT 기술이 금융적 수용성, 빈곤 감소, 보건 개선 등 긍정적이고 유의미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탄자니아의 2016년 인터넷 가입 및 보급률 추이입니다.

보급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용환경은 90% 이상이 모바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바일 이동통신의 경우 인터넷보다 보급률과 이용률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2017년 말에 최빈곤국가의 인터넷 가입률은 7억 명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80% 이상은 이동통신 네트워크 이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의 격차와 교육 부족, 그리고 쓰리지 네트워크의 사용으로 인해 핵심적인 장벽이 여전히 있는 상황입니다.

-(김소희) :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 접근성이 경제개발을 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용 환경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배혜민) : 인터넷은 경제발전의 수단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 그 자체로 경제를 뒷받침하는 인프라이기도 합니다.

인터넷의 역할이 비대해지면서 인터넷 산업 자체도 발전하였지만 그보다는 기존 산업의 효율성과 연결성을 증대하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인터넷은 전 세계를 연결하는 통로로써 그리고 인프라로써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의 폭넓은 도입을 통해 경제적으로는 거래비용의 감소, 시간의 절약, 그리고 프로세스의 단순화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측면을 넘어서도 인터넷은 전기, 물과 같은 필수적인 인프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됨에 따라서 인터넷이 일상생활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표현하는 인터넷경제라는 용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하선) : 일자리 관련 논의로 이어가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혁신은 IT 기반의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경제 전반에 걸쳐 창출할 것입니다. 매킨지에서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은 전통적 기업과 고용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새로운 일자리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예컨대 2011년 프랑스에서는 인터넷이 등장한 이후 약 10여 년간 5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반면 120만 개의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원다인) : 인프라로 기능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에서 비롯된 것은 빈곤국가의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동전화와 널리 보급되지 않았던 때 통신율이 1% 증가할 때 마다 GDP가 0.03%씩 증가한다

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인터넷과 경제성장 사이에는 양의 관계가 형성될 때 있음이 이미 입증된 것입니다. 매킨지는 아프리카의 변화를 가져오는 인터넷의 잠재력 보고서에서 인터넷이 향후 10년 동안 아프리카 대륙에서 최대 3000억 달러의 GDP 달성과 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모바일 네트워크 공급자는 아프리카에 90억 이상을 투자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아프리카의 국가들의 GDP에서 평균 7%를 차지하고 있으며 통신수단에 대한 투자는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투자에서 5% 가량에 이르렀습니다.

-(유하선) : 맞습니다. 인터넷은 경제성장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경제가 긍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금융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인터넷생태계 발전은 서로 상호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자상거래의 확산, 인적자본이나 인프라, 비즈니스 환경조성 역시 필수적입니다.

아프리카 은행 시스템은 낙후되어 있고 특히 금융서비스 제공자들이 아프리카를 주요 시장으로 여기지 않아 전체 인구의 30% 미만만이 은행계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동단말을 이용한 모바일 금융서비스가 국민들의 일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보고서에서는 사하라, 아프리카가 12%가 모바일 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모바일 금융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혜민) : 전문가들은 인터넷이 이미 아프리카에서 발전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국외 투자를 불러일으켰고 이는 국가의 이익과 직결됩니다. 앞으로는 건전한 인터넷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금융자본 확보의 유연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거래 활성화 등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김소희) : 직접적인 경제 발전을 가져올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 확산이 국민의 경제적, 서비스 개선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익과 직결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다인) : 모바일 휴대폰을 매개로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은 기본 사업을 불러오거나 촉진시키기도 합니다.

이들의 휴대폰 사용 목적은 주로 다양한 지역 시장의 수산물 가격을 확인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이동거리를 최소화하고 매출을 최대화하여 낭비를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휴대폰은 여러 기존 산업에 종사하는 상인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물에 대한 정당한 대가와 보상을 받게 합니다.

-(김소희) : 지금까지 인터넷이 지속 가능한 발전, 인프라 구축, 일자리 창출 그리고 경제성장 그리고 기존산업 생산성 증대 등 경제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논점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ICT가 빈곤국가에 끼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혜민) : 즉 소위 정보격차라 불리는 것은 더 광범위한 발전격차의 일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사회 경제적 발전이 ICT의 사용증가를 가져온다는 의미입니다.

인터넷 사용을 위한 자원구조 역시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제전기통신연합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리카 인구의 79.4%가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한 지역에 있으며 예멘 등의 지역에서는 15%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기라는 필수적인 자원이 보급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세계 빈곤국가에서는 네트워크 서비스 비용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동노동을 비롯한 장치 광물 활용 문제에 있어 인권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

습니다. 국가의 경제력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의 인권과 권리가 외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김소희) : 인터넷 도입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모든 기술이 그러하듯 ICT는 지역적인 필요와 수용적인 맥락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이 건전하게 구축된 국가일수록 인터넷이 경제에 기여하는 게 달라지는데요.

빠르기보다는 긍정적인 인터넷 보급과 구축을 위해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김태은 연구위원님의 의견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은) : 인터넷 이전에는 ICT로 불렸죠.

여태까지 포함해서 많은 연구가 있었고요. 실제로 사례 연구를 통해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나아가서 브로드밴드가 GDP 성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표현이 되었고 심지어 브로드밴드 속도에 따라서 그것이 어떻게 달라질까를 다룰 만큼 경제적인 것에 대한 동기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단계를 넘어서 4차 산업혁명이 되면 확산이라는 부분까지 들어가는 거죠.

통신망 때문이 아니라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랬다면 국제 전략의 ICT가 빠질 수 없는 건 분명한 거고요.

국가발전은 다 다르고 성과는 다 다르지만 모든 개도국들도 이런 국가전략 발전을 갖고자 하고 많은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같이 경험을 공유하는 나라로부터 받기도 하고 국제기구로부터 받기도 하고 또는 돈을 디벨롭먼트 뱅크로부터 자문을 받습니다. 중요한 거를 알고 있고 하면 좋은 것도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돈이 없고 시스템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외적으로 지금 성과가 나왔다고까지 이야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프리카의 르완다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집중을 하면서 개발독재라는 느낌을 주면서 또 나라가 작다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거기에서 내란도 거치면서 기성세대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문화적인 이유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쪽에서 성과가 나타난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나오고는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아프리카가 잠재력이 많다는 이야기인 것도 많지만 아프리카의 기대에 비하면 성과가 늦어지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모바일 머니가 아프리카에서 성공했잖아요.

그렇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금융이라는 게 기존에 없었기 때문에 대체한 거죠.

어떻게 보면 산업 기반도 없는 나라에서 인터넷, ICT 기반으로 한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많은 나라들이 특히 정책 결정자들은 많은 사례를 봤기 때문에 하면 좋은 건 알지만 문제가 있고 자기네 정부 조직이 그거를 할 역량이 안 되고 시스템도 안 되고, 전기 이야기 했는데 전기 없으면 아무 것도 안 되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국민들은 필요성을 못 느낄 수도 있어요. 멀리서 서서 뭐가 필요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인도가 모디 총리가 진행을 했었는데 소프트웨어 잘하는 사람이 많으면 되기는 되지만 국민들의 이용은 눈에 띄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현금을 좋아하는 인도 사람들의 현금을 끌어내기 위해서 화폐개혁을 합니다.

화폐개혁의 부수적인 효과가 뭐였냐면 모바일 머니가 가입이 급증이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 사람이 그전에는 그거를 하겠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당장 은행에서 돈을 못 받고 하니까 모바일에 가입을 해서 하는 식으로요.

필요가 생기고, 정부의 푸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되면서 개도국들이 도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라든가 그런 계획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요.

발전 격차가 나오는데요. 노동 문제가 나오는데 아프리카나 개도국들이 핸드폰이 많이 보급은 됐지만 아직도 격차가 존재는 합니다.

핸드폰을 가진 사람만이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 그거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소위 못 사는 사람들과의 격차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맨 처음에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가사노동이나 그런 것들을 상품화해서 서비스로 할 수 있다는 좋은 전망도 많았는데 실제로는 그런 것들은 전화를 잘 이용하고 정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독점을 하게 되었고요.

실제로 그런 기회가 옛날에 했었던 사람들은 그 기회가 없어져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이런 식의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정보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필요성이나 그런 것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감이 있어야지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을 가져가는 인구는 정해져있거나 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희는 국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ICT를 국가 발전의 전략으로 많이 보는 파트너들하고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이 하고 그 나라 국민이 그거를 잘 쓰는 것은 그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주는 자문 아래 분명히 국가 정보화라든가 소외 계층의 이야기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이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그게 아니라면 또 의도가 안 좋아서 몇 몇의 상류층들이 돈을 벌겠다는 거에 집중한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자문을 해주고 투자를 해줘도 국민들에게 퍼지지 않기 때문에 정책 리더십의 의도도 굉장히 중요하고 수행하는 사람의 의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원다인) : 아프리카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계와 성과, 정책적인 시스템의 한계, 그리고 노동에서의 격차를 위해서 인터넷의 한계를 줄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나눠볼 이야기는 인터넷의 보급과 민주주의의 발전입니다.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빈곤 국가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국가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에게 인터넷 보급은 단체 행동을 할 때 빈부가 절감되는 효과도 있어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여하기보다는 권위적인 정권으로 고착화시키기도 하는데요. 어느 국가들이 왜 어떻게 악용하고 있는지 더불어 앞으로 빈곤 국가에서 인터넷이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더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다음 보시는 지도는 프리덤 온 더 네트에서의 인터넷 자유화 지도입니다.

초록색이 가장 높은 것, 노란색이 중간, 보라색이 자유화가 보장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나라에서 자유화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데요.

-(김소희) : 대표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미얀마, 중국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인터넷상에서 이슬람 율법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제할 뿐만 아니라 반정부적인 것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터넷 검열은 알카이다나 테러리스트와의 전쟁에서 국민들에게 이념을 심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검열은 시민들의 신고로 이루어져서 적은 인원으로 인터넷 검열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효율적인 인터넷 검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원다인) : 시간 관계상 더 자세한 이야기를 못 드리지만 미얀마, 중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상태가 심각한 것 같네요. 지금까지 여러 국가에서의 인터넷 검열을 살펴봤지만 인터넷 검열은 대한민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나요?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하선) : 포르노물이나 잔인한 장면은 검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은 국가들의 경우에는 검열이 첫째로 정치적으로 악용되기 쉽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정부적인 문제를 언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도발로 간주하여 낙인을 찍는데요. 실제로 이 나라에서는 정치와 관련된 논의는 나라에 혼란을 가져온다면 일괄 차단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인터넷이 중앙집권적인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인데요.

정부가 오해할 길이 없이 중앙으로 모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트래픽을 관리하기가 더 쉬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인터넷을 차단하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개인정보도 정부에 입맛에 맞게 활용되기도 합니다.

악용 방식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정부적인 내용을 차단하는 것, 두 번째로는 정치적인 선전수단으로 의도적으로 가짜 뉴스를 배포하는 것, 세 번째는 친정부적인 내용을 전파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원다인) : 결국 권위적인 국가에서 이러한 악용이 일어날 수 있으며 정부의 검열이 입맛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군요.

그렇다면 개방하지 못하는 국가들이 개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유도하는 방향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배혜민) : 국가들에서 검열을 하기 어려운 이유는 검열 대상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적으로 검열 기준이 다르고 엄격하고 복잡합니다.

중국식 인터넷 검열이 등장하면서 그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사용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국민들과 자유를 누리는 국민들이 함께 인터넷 검열에 맞서야 합니다.

더불어 중국식 인터넷 검열의 확산을 막고 정치적인 내용에 대해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연례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유하선) :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프라이빗 섹터니까 민간 부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요.

인터넷 규제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독단적인 역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역할도 중요한데요. 실제로 전문가들은 테드 강연에서 중국의 사례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중국이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인터넷 사용이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모든 정보를 정부가 통제하고 있어서 인터넷이 폐쇄적인 공간이라고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큰 불편함이 없다보니 중국 시민들은 인터넷 검열에 익숙해지고 따라서 검열에 대한 개선될 여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인터넷 검열이 잘못 되

었다는 사실의 정보가 알려지고 동시에 인터넷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만들어진다면 훨씬 더 자유로운 인터넷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배혜민) : 또한 중국식 인터넷 검열의 확산을 막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을 검열하는 국가들이 증가하는 것이 대표적인 원인의 하나가 중국식 검열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시민은 이에 익숙해지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배후에는 서방 국가들의 기술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업체인 샌드با이는 인터넷을 차단하는 것을 도왔다고 합니다.

-(김소희) :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인터넷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들의 인권탄압 실태에 대한 더 많은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사용에 대한 여러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원다인) : 인터넷 검열 국가에 대해 인터넷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에서는 보고서 및 더 많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더 나아가 국제사회에서도 이들을 제지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이야기 해 주셨습니다.

빈곤국가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인터넷을 개방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였다면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인터넷 정치설 악용의 가장 큰 원인은 중앙집권적인 관리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는 과연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김소희) : 아까 발표자도 말했듯이 무료 인터넷이라는 이유로 하나의 기관이 인터넷 보급을 독점하는 상황부터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얀마에서 이게 문제가 심각해진 이유가 저렴한 가격에 보급된 페이스북이 웹 브라우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아직 온라인 신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여과 없이 이루어진 수용이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고 봅니다.

-(유하선) : 더불어 매체의 습득과 활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코이카에서는 인터넷 보급에 대한 것은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로 인터넷 빈곤 국가들의 정보 활용에 대한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보를 활용하고 좋은 정보를 추리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배혜민) : 이어서 기술적으로는 블록체인을 통해서도 중앙집권적인 인터넷 보급 체제에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블록체인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서버가 전 세계에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전부 검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더리움이라는 컴퓨터 플랫폼은 어떠한 기업도 어떠한 사이트도 소유하지 않은 분산된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또한 기술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다인) : 현재 인터넷 사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국가들에서는 인터넷으로 얻은 개인정보가 개인의 평가와 차등대우에 사용되기도 하고 아직은 부실한 개인정보보호로 인해 각종 범죄에 악용되기도 하며 구속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이 막 보급된 탄자니아에서는 사이버 공격의 표적이 되어 위험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빈곤국가에서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정성은 어떻게 정해져야 될까요?

-(김소희) : 국가들의 개인정보 지수는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이는 아직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충분한 것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관련된 인증을 받기 위한 기술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충분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부의 정보를 공개한다기보다도 사이버 보호 장치를 구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 (배혜민) : 우리는 올바른 소셜미디어를 선택할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셜미디어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암호화하고 사용자를 저장하지 않고 광고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페이스북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더 안전하고 정보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는 소셜미디어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원다인) : 개인정보보호를 논할 때 가짜 뉴스를 빼놓고서는 논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프리카의 가짜 뉴스 또한 심각한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짜뉴스가 팽배한 이유는 무엇이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며 누가 이들을 막아야 하는 걸까요?

- (김소희) : 현재 아프리카에서는 언론사 중에서도 앱, 웹사이트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로 페이스북을 통해 전달되는 내용은 지인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뉴스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소셜미디어의 특성상 쉽게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짜 뉴스의 전파속도를 높이기도 합니다.

- (유하선) : 가짜뉴스 배포에 누가 책임이 있고 누가 이들을 막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이들을 악용하는 아프리카 정부에 대한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나이지리아, 케냐 등에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논리를 펼치며 정부 비판적인 글을 올리는 경우에도 가짜뉴스라고 단속하고는 합니다.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방안이라기보다는 정부의 입맛에 맞춰 상황을 해결하는 데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배혜민) : 앞선 주제에서도 계속 언급되다시피 정보활용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이제는 허위성 확인, 팩트체킹을 넘어서서 자율적인 정보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 (원다인) : 이외에도 가짜뉴스를 판별하기 위한 장치도 구축이 되어야 하는데요. 현재 어떠한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하나요?

- (김소희) : 현재 페이크 뉴스를 가리는 방법은 비기술적인 것과 기술적인 것이 있는데요. 향후에는 기술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한 인공지능 기반 탐지 등이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 (원다인) :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이와 같은 것이 적절하게 사용이 되어 더 이상 가짜뉴스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은 부의원의 의견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 (김태은) : 인터넷이라는 성격은 자유로운 것인데요.

권위적인 국가나 독재국가들이 인터넷에 접근하는 방식인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검열이라든가 차단, 정보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그중에 극단적인 거는 북한이나 에티오피아처럼 완전차단이 있을 거고 자기가 원하는 식의 기준을 가지고 중국처럼 선별해서 검열을 통해서 막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여기서는 대부분 주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기네의 고유적이고 문화고 그런 거라 세부적인 내용은 없을지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 비난을 받는 것을 용납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식의 부분이 뒤에 그러면 어떻게 개방을 유도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단순하게 인터넷 발전이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다른 맥에 있는 것이 새롭게 인터넷이 발전하고 새로운 생태계가 나오면서 혁신이라는 것들을 이 나라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것을 발전시켜야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알리바바나 이런 식의 발전을 하고 자기네가 막을 건 막고 하고자 하는 게 중국식 검열이 그런 맥락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내제적으로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서 개방으로 나아가겠지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것은 분명하다고 느껴지고요.

조장이라고 하는 것들, 건강하지 못한 사이버 페이스의 문제인데 페이크 뉴스나 그것을 방관하는 정부 체제나 이런 게 있는데요.

전에 것도 그러면 민주주의하고 관련된 건데 선거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우려표명을 해요. 아까 콩고도 토론을 못하게 했다고 하지만 이런 게 됨으로 해서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거를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동의, 법률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것을 통해서 막고자 하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정부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민간인도 있을 수 있고 영화에 나오듯이 민간도 있을 수 있고 다른 국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우려는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나라도 유출됐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유럽 쪽에서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어떤 제도들이 나오고 그러는데요.

개인정보를 가지고 사업하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거를 계속 해킹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로 제도 자체가 완비된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은 사고인 것 같고 제도가 안 되는 거는 거버넌스가 취약한 부분이라 별도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아프리카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렇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아프리카의 권위적인 정부들은 인터넷을 조작하거나 또는 인터넷을 막거나 하는 데 거리낌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외부에 펀딩을 받아서 발전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돈을 주는 것도 기준이 있거든요. 너희가 이러한 시스템이 완비가 되지 않으면 안 준다, 투명성이 없으면 안 준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외부적 압력으로 인해서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다인) :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의 노력, 거버넌스로서의 역할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분야입니다.

-(배혜민) : 마지막으로 나누어볼 이야기는 인터넷 보급과 아동교육, 여성역량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터넷은 교육기회의 격차를 줄이고 더 나은 학습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에 앞서서 최근 전반적인 교육 ODA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소희) : 4번 교육의 중요성은 끊임없이 언급되고 있지만 실제로 ODA는 전 세계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4번을 달성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할 수 없지만 아직까지는 이러한 비용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배혜민) : 현재보다 6배 증가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떤가요?

-(김소희) : 전 세계 상황도 심각한데 우리나라도 그 비중이 더 적습니다.

OECD 회원국들이 다 부분을 중시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경제와 생산 부문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기초분야 ODA는 평균의 6%에 불과합니다.

-(원다인) : 한국정부가 교육 분야의 ODA의 지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2016년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타 국가보다 4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교육정보화를 목표로 삼고 여러 사업을 하고 있으며 코이카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중고등학생들에게 첨단 ICT를 활용한 교실을 지원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안내드리고 싶은 것은 코이카의 CTS 프로그램인데요. CTS는 혁신가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ODA에 접근하여 해결책을 찾는 데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부터 CTS를 통해 총 56개의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하였는데요. 보건, 물, 에너지, 신생 이슈 등 다섯 가지 분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배혜민) : 한국 정부의 교육 ODA 역시 부족하지만 정보통신의 기술을 결합한 ODA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CTS 프로그램의 선정된 사업 중 하나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원다인) :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연속적으로 대상자로 선정된 에누마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개도국 환경에 최적화된 곳에 킷킷학교를 지원합니다. 교사가 없을 때도 태블릿만으로도 교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는 개인별 학습차이를 감안하여 설립이 되었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빈곤 아동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효과적인 교육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는데요. 탄자니아 시골에 30만 달러 정도가 필요하지만 킷킷학교가 탑재된 태블릿과 휴대용 충전기는 10분의 1 이하의 비용으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배혜민) : 인터넷 기술을 통해 빈곤국 아동들을 위한 특화된 콘텐츠를 개발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개발이 기대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계적 고장이나 소프트웨어의 한계점들은 어떻게 극복을 해나가야 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혹시 킷킷학교처럼 교육 목적으로 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사례가 있을까요?

-(유하선) :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도 교육용 콘텐츠는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빈곤층 아동들에게 특화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화된 콘텐츠를 개발하지 못한 실패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엘피씨인데요.

메사추세츠 연구진이 세운 비영리단체이자 아이들에게 컴퓨터를 보급하려는 프로젝트로 100달러로 컴퓨터를 개발하였습니다. 2008년도에 생산하여 40개국 어린이에게 총 200만대를 전달하였지만 교육적 효과는 실제적으로 미비했습니다. 그 이유는 장치가 튼튼하지 못하다는 문제입니다. 기계문제가 고장이 심하게 났고 100달러 가격도 맞추지 못하였습니다.

타 컴퓨터와 호환이 되지 않는 썬 부품으로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대로 된 교육 콘텐츠 없이 노트북만 보급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로 인해서 인터넷 서핑이나 개인의 목표로 사용이 되었고 중단이 되었습니다.

-(배혜민) : 혁신적인 아이디어처럼 보였지만 제대로 된 교육 콘텐츠 없이 진행하다보니 교육 효과가 나지 않아 실패한 사례였습니다. 디지털 테크놀로지로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김소희) : 하드웨어에 치중한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모비스테이션인데요.

이러한 별명을 가지고 있으며 캐리어 모양 안에 빔프로젝트, 노트북, 마이크, 배터리 등 다양

한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 전기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인데요.

바로 태양 에너지 패널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입니다.

모비스테이션 작동의 간단한 교육을 통해서 담당자가 설치 후 재생을 시키기만 한다면 바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질병 및 보건 전문가가 없이도 에이즈에 대한 교육이 가능해진 것이죠.

-(배혜민) : 인터넷 기술과 교육이 결합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인터넷 기술개발과 함께 통신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크는 대규모 사용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공개 수업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대학 수업을 온라인으로 접속해 볼 수 있는 강의를 무크라고 표현합니다.

아직까지는 선진국의 대학 강의만을 가리키는 개념입니다.

1세대 무크가 성공하자 무크가 미래 대학교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무크가 빈곤국가의 지역에서 빈곤교육을 대체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유하선) : 무크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임에도 분명했지만 한계점도 있었습니다. 빈곤국가에게 확대할 수 있는지 또 인터넷 교육이 현장교육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지적하는 것은 낮은 수료율인데요. 강제성이 없고 학생들 간의 교류가 없어서 중도 포기자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낮은 수료율로 인해서 무크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수료율은 무크 효과는 다른 시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무크 수강생 중에 79%는 이미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소지자였고 50%는 정규직 직장인, 학생은 단 17%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지적인 호기심을 위해서 무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빈곤층 아동이 받는 기초교육과 선진국 청년이 받는 대학교육의 차이점은 큼니다. 이러한 현황으로 인해서 온라인 교육의 한계점을 짚어볼 수는 있습니다. 개인적인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온라인에서 양질의 강의를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무크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기초교육을 받기 위해 온라인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빈곤층 아동들에게 제공할 때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김소희) : 이렇게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일방적이고 수동적일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무크는 진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시간 채팅을 지원하는 수업도 늘어나고 있고 진짜 강의를 수강하듯 숙제를 제출하고 조교와 화상상담도 받고 온라인으로 학생들과 토론하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배혜민) : 심지어 최근에는 성공 사례까지 나왔는데요. 몽골의 한 고등학생이 무크에서 받은 좋은 성적을 바탕으로 MIT에 합격한 사례입니다.

빈곤 아동들에게 특화된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렇게 빈곤 국가의 무크 등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강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빈곤국 여성에게 경제활동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유하선) : 특히 소셜 미디어 분야에서 여성의 힘을 뒷받침하는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해서 여성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필요한 새로운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과거에는 도서관에 모든 정보가 집중이 되어 있었다면 그래서 여성들이 몇 시간 동안 책을 읽고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인터넷을 통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아니면 트위터를 통해서 여성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인터넷의 중요한 장점이자 의의입니다.

-(배혜민) :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유하선) : 여성과 인터넷을 결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데요. 네팔에서 실시된 아마코마야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네팔 시골 여성들에게 임산부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해당 시골 지역 여성들은 관련 지식이 부족해서 산모 사망률이나 신생아 사망률이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모바일 핸드폰 보급률이 높아서 이를 사용해서 모바일 플랫폼으로 확장이 되었고 병원에서도 네트워크를 형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한국에서는 여성의 인권을 높이는 사업은 한 건도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요. 기술이 발전하고 여성의 인권제고 필요성이 커져가지만 이를 활용하는 사업은 세계적으로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배혜민) : 빈곤국의 여성은 다각적인 방향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업 진행이 이루어지 않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주요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 질문을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의 교육 ODA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다인) :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ODA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지만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고등 교육 이상을 받은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간다면 효율적인 ODA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엇보다 오늘 교육 파트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바로 교육 콘텐츠의 개발입니다.

우리 정부는 교육 분야의 ODA에서 빈곤국 아동에게 특화된 콘텐츠 개발에 조금 더 힘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배혜민) : 여기까지 인터넷과 교육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시간이 조금 초과되기는 했지만 간단하게 김태은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 : 교육 같은 경우에는 SDG이전에 초등 교육과 관련해서 목표를 달성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내용적인 부실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게 이런 ICT를 활용한 교육이 아닐까 싶고요.

초등교육의 세컨더리나 디지털 리터런시를 높이는 부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빈곤국 여성 문제가 심각한데요.

일단은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회를 줄 것도 분명하고 그런데요.

물론 2014년 이후로 젠더이슈가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아프리카의 여성들은 물 길어오는 거를 포함한 육아, 생산노동까지 하느라고 인터넷에 접속할 시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권위적인 문화를 가진 나라에서는 여자들은 남편의 허락이 없으면 전화를 소유하거나 전화를 이용하거나 인터넷은 당연하고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기 때문에 인터넷에 접속하는 순간 현실 세계와 똑같은 위협

을 사이버 공간에서 더 느끼게 되는 게 그런 나라들이고요.

그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는 게 한 축이 있고요.

실제로 많은 아이씨오티 생태계가 변화하면서 2014년부터 지금까지 4~5년간의 숫자적으로 개선된 게 많이 나옵니다.

젠더별로 봤을 때 남자로 봤을 때 낮기는 하지만 많이 개선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허락을 많이 해 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 부분들이 있어서 개선이 돼 가고 있고 개선하고자 하는 국제기구의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진행이 될 거라고는 하지만 특히 빈곤국의 여성들이 접근성 부분에 있어서도 극복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 단계는 그러면 진짜 이 사람들이 액티비한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가.

ICT를 활용해서 뭘 할 수가 있느냐는 다른 문제고요.

ICT 산업에서 젠더에서 했던 게 포스터에 보면 여자는 마이크를 끼고 이렇게 나오고 남자는 CEO로 나오는 게 차별이라는 게 이야기가 나왔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ICT 산업에서 여자들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식의 편견이 존재하고요. 여자는 수학이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요.

저희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많은 ICT 기업이나 기구에서의 고위급의 여자가 있나를 봤을 때도 어렵다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 존재한다고 봤을 때 많이 개선할 여지가 있고 많은 노력이 있고 그게 개인 차원에서든 기구 차원에서든 국가에서는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원다인) : 권위주의적인 국가에서 빈곤한 여성들의 지위가 향상이 되어야지 콘텐츠 개발도 될 것이고 ICT 환경 개선이 되어야 이러한 논의가 더 자유롭게 확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빈곤국가의 인터넷 보급과 SDG라는 주제로 발표와 패널 토론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제너럴한 내용만 나누었지만 더 많은 논의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빈곤국가 인터넷 보급에도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간 관계상 한두 분 정도의 질문만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 주세요.

-(플로어) : 안녕하세요. 저는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3학년에 재학 중인 장은실이라고 합니다.

우선 SDG 관련해서 인터넷 보급, 인터넷 없이 살지 못하는 글로벌 사회 속에서 인터넷 보급을 위한 SDG와의 연계를 많이 말씀해 주셔서 재미있게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문제제기를 해 주실 때 제가 조금 듣고 싶었던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터넷 보급을 위한 어떤 기술적인 논의나 아니면 여러 섹터들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근본적으로 이 인터넷 보급이 왜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문제제기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듣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김태은 연구위원님도 잠시 말씀해 주셨지만 이러한 논의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은 인터넷 보급보다도 사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저도 질문을 드리는데요.

인권보다 빵, 빵이 곧 인권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당장 내일의 먹고 살 문제가 시급한 최빈곤국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뭔가 가짜뉴스랑 관련된 알권리나 정보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조금 더 근본적인 가치 이외에도 실질적인 효용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인터넷 보급과 관련하게 무엇이 있는가를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다인) :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완이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질문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도 인정하고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지금까지 빈곤 국가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있어서 우리가 쉽게 빵이라든지 자원을 기부해야 한다든지 이러한 방식들은 쉽게 떠올릴 수 있지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빈곤국가에서 인터넷 사용률이 떨어지고 여기서 인터넷 진입을 방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빈곤국가가 언제까지나 빈곤국가로 남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대한 이러한 개선점을 개선해 주어야지만 앞으로 빈곤국가에서 벗어나 다른 국가와의 소통에 있어서도, 그리고 정말 국민답게 살기 위해서도 또 더붙어서 빈곤국가가 빈곤국가로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권위적인 국가가 계속 지속이 된다는 정부 자체가 국가를 잘 관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인터넷 보급이 이러한 정부에 좀 더 건전한 형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넓은 범위에서 장기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인터넷 보급이 이루어져야 빈곤 국가도 빈곤 국가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플로어) : 연세대학교 이과대학교 재학생입니다.

제 질문 사항은 인터넷을 보급하는 데에 있어서 국제보호단체나 코이카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권위주의적인 정부가 존재하는 곳에서 해당 국민들이 어떻게 인터넷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덜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인프라에만 집중을 한다면 그런 것들을 가속화할 수 있는 게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배혜민) : 우선 그러한 문제점들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 발표 중간 중간에 언급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캐나다의 유명 기업이 인터넷 차단을 도왔다든가 아니면 오엘피씨라는 모든 아이들에게 노트북을 한 대씩 보급하자는 사업이 중단된 이유도 처음에는 그런 해외 기업들이 지원을 했다가 마지막에는 흐지부지 되면서,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역할이 해외 기업들이 자금을 빼서 결정적으로 실패로 막을 내리게 되었던 것인데요.

이런 문제에서 알 수 있듯이 해외 기업에서는 빈곤 국가의 문제들을 조금 더 비즈니스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원다인) : 조금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는 엔지오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포럼에서 이런 이야기가 공론화되는 것 또한 기업들의 횡포를 막는 데에 도움을 일정 부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저희 세션의 모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끝>